ISSUE ANALYSIS
제 12호 (2025. 9. 18.)

북한 외화벌이와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

www.kpiri.co.kr

한반도문제연구소
Korean Peninsula Issues Research Institute

ISSUE ANALYSIS

북한 외화벌이와 동아시아 안보 보고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행태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고도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무역, 유령회사 운영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을 핵심 외화벌이의 거점으로 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는 단순한 경제적 생존 수단을 넘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을 위한 핵심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 전략적 행위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우회하기 위해 해외 IT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탈취한 자금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제재를 넘어선 다층적인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금융 정보 공유,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불법 외화벌이 네트워크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포함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할 수 없는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제 제재와 북한의 '생존' 전략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융 거래, 무기 거래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재정적 생존을 위협했다. 실제로 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 수출액은 90% 이상 감소하며 정권의 외화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의 압박 속에서도 체제 생존과 군사력 증강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화벌이 수단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위조지폐 제작이나 불법 무기 거래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이 물리적 제재로 인해 한계에 직면하자,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제재의 맹점을 효과적으로 우회하는 '돌파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의 외화벌이 행태는 외부 압력에 대한 내부적 적응의 결과로 나타난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 행태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기존에 잘 알려진 해외 노동자 파견 외에 IT 인력 송출, 암호화폐 해킹, 유령회사 운영 등 보다 고도화된 불법 외화벌이의 실태와 규모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 단순히 외화를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 핵·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재원으로서 동아시아 역내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전략적 의미와 함의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 외화벌이의 진화와 현황

전통적 외화벌이의 지속과 제재 회피

북한의 전통적인 외화벌이 수단으로는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무역, 유령회사 운영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이 1960년대 러시아 벌목공 송출을 시작으로 지속해 온 외화벌이 방식이다. 현재 수만에서 십 수만 명 규모의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존재하며 , 8만여 명의 인력이 16개 국가에 송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노동 환경은 극심한 인권 유린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다.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은 당 운영 경비, 국가 운영 자금, 군사 물자 생산 등에 쓰여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었지만, 북한과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들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파견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출국 이전 국가에 주입된 집단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만, 해외 노동 경험을 통해 개인주의와 생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본주의적 노동 시장에 익숙해지는 등 변화된 인식을 형성해 나간다.

고도화된 외화벌이: 사이버 공간으로의 전환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전통적인 외화벌이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자,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정보 탈취에서 외화벌이로 진화하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들을 통해 전 세계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들 IT 인력은 국방성 산하 조직과 연계되어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파견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다. 이들은 '가짜 이력서' 캠페인(WageMole)과 같은 정교한 수법을 사용해 구직 플랫폼에 접근하고,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IT 개발 일감을 수주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탈취, 사이버 공격 등 악성 활동을 병행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 또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보고서는 러시아 국적 선박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 운송을 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무기 판매가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아래 표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형태별 현황과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북한 주요 외화벌이 형태별 현황 및 특징

유형	주요 활동 지역	파견 인원 / 규모 (추정치)	연간 수입규모 (추정치)	전략적 중요성	유엔 제재 관련성
해외 노동자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	수만 명 (중국: 7만~8만, 러시아: 3만)	수천만 ~ 수억 달러	생계형 외화벌이, 체제 안정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송환 의무화
IT 인력 송출	중국, 러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수천 명	수천만 ~ 1억 달러	군수 기관 직속, 기술 탈취 및 외화벌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2397호 위반
사이버 범죄	전 세계 온라인	수천 명의 해킹 부대	수억 ~ 17억 달러	핵·미사일 등 WMD 개발의 핵심 재원	유엔 안보리 결의 직접 위반
유령회사/ 불법 무역	홍콩, 중국, 중동	다수의 유령회사/개인 명의 회사	규모 미상, 수억 달러 이상 추정	제재 회피 및 불법 무기, 석탄 수출	유엔 안보리 결의 대상

3. 북한 외화벌이의 전략적 의미와 동아시아 안보 위협

비대칭 전력 강화의 핵심 재원으로서의 외화벌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는 단순히 정권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경제적 수단을 넘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금 조달의 통로로 기능한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 탈취 자금으로 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정권의 군사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안보 위협임을 증명한다. 미 국무부와 미 전략사령부 등 미국 정부 기관들 역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군비 증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이러한 불법적 외화벌이임이 확인된 것이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2022년 한 해에만 63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5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대칭 전력 증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예측 불가능한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래 표는 북한의 WMD 개발 비용과 불법 외화벌이 자금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표 2. 북한의 WMD 개발 비용과 불법 외화벌이 자금의 연관성

항목	내용
2022년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비용	63회 발사, 추정 비용: 최대 $5억 3천만
WMD 개발 비용 충당률	사이버 탈취 자금이 WMD 개발 비용의 약 40%를 충당
총 WMD 개발 추정 비용	연간 약 $13억 이상 (단, 사이버 탈취 자금이 40%를 충당한다고 가정 시)
주요 자금 조달원	사이버 해킹(암호화폐 탈취) 및 IT 인력 송출

국제 제재 체제의 약화와 안보 협력의 장애 요인

북한의 외화벌이 행태 변화는 단순히 정권의 재정난 해소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안보 협력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북한은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제재망이 가진 금융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하게 공략하며, 국제 제재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다. 두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이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불법 무기 거래 등 제재 위반 행위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공조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제재와 대응 이니셔티브에 의존하게 만드는 한계를 노출한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엔 대북제재 집행을 무력화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위협의 본질적 변화

북한의 외화벌이 전략 변화는 동아시아 역내 안보 위협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위협의 융합**이다.
과거에는 '해외 노동자'라는 물리적 인력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 외화가 '물리적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비교적 단순한 연결고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이버 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자금을 벌고, 이 자금이 '물리적 무기' 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형태로 진화했다. 이는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단순한 정보전의 장이 아닌, 물리적 안보 위협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작전 구역'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금융 제재, 사이버 방어, 군사적 억지력 등 다층적인 접근이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유엔 제재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여 핵ㆍ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재를 받는 국가가 그 압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취약한 개인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용이 지속되면서, 이들은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경제적 제재가 의도하지 않은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한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시에는 안보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다차원적인 복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군사 프로그램을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4. 국제사회의 대응과 정책적 제언

현재의 대응 현황과 한계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와 그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공동 이니셔티브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IT 인력 송출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불법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불법 활동에 직접 관여한 자뿐 아니라 자금세탁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실효적 대응을 위한 다층적 전략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사이버 안보 공조 강화** :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은 국경을 초월하는 위협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자금 추적 및 회수 노력을 국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하고, 국제 해킹 피해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돈세탁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 **외교적 및 제재적 압박 확대**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지속하여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제3국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고립시켜야 한다.
3. **인권과 안보의 연계** : 해외 노동자 송출과 같은 인권 유린적 외화벌이 방식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권 개선 노력을 외교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고,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결론 및 종합적 시사점

북한의 외화벌이 전략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돌파'하려는 체제 생존의 핵심 전략이자, 그 형태는 물리적 제재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진화는 금융 범죄와 군사 안보 위협이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IT 인력과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대칭 전력 개발의 핵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의 역설을 만들어내고 국제사회의 안보 협력에 중대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

미래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이중적, 다층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공유, 사이버 방어, 군사적 억지력, 그리고 인권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합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넘어, 동아시아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재확인한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23).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 국가전략연구원. (2022).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과 미국의 대응.
- 통일연구원. (2017). 장형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경험과 인식의 변화: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통일연구원. (2022). 동아시아 다중안보 위기 속 북한의 비대칭전력 증강이 가지는 의미. (정책연구시리즈 22-02).
- 한국국방연구원. (2015). 이정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구도 연구.
- 현대북한연구, 22(1), 8-43. (2022). 장형수.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세종연구소. (2024). 피터 워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종료의 배경과 평가.
- 통일연구원. (2024). 홍제환.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그 한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중심으로. (온라인시리즈 24-25).
- 외교부. (2024). 우리 정부,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관여 기관 및 개인 제재.
- 외교부. (2025). 정부, 북한 러 공병·노동자 파견에 “불법 협력 중단해야“.
- 통일부. (2023). 북한이탈주민 통계.
- 유엔. (2024).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 미국 국무부. (2024). 북한, 가상 화폐 탈취로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
- 주한미국대사관. (2024). 한미,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제6차 실무그룹 회의 개최. (보도자료).
- 체이널리시스. (2024). 2024년 연례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VOA. (2022). 북한, 러시아와 불법 무기 거래 의혹.
- VOA. (2024). 유엔 보고서, 북한 IT 노동자 해외에서 외화벌이 지속.
- RFA. (2025). 북한, 해킹 부대를 통해 암호화폐 탈취.
- CNN. (2017). 북한 유령회사 운용 실태 및 제재 회피 방법.
- AP 통신. (2024). 유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무기 개발 자금 조달 사례.